



난민·이주민

7개월째 구금돼 있는 리비아 난민 3면 | 난민 인정 요구하며
농성하는 이집트 난민들 3면 | 국경 통제의 희생자 5면 |
법무부, 전신 결박 의자 도입 계획 철회 16면

알렉스 칼리니코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논쟁

7~10면

제국주의는
이제
옛일인가?

14~15면

COP27 이집트 회의
개최 반대
이집트 활동가 호소문

6면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11~13면

난민 불인정·단속·구금·고문·추방...

난민 인정에 인색한 한국 정부

정부는 난민에게 문을 열어라

관련 기사 3, 5, 16면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들 앞에선 낙태 지원, 뒤에선 반낙태 정치인 후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지 2주가 지났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주에서 낙태 금지·제한 조치가 속속 발효되고 있다.

대통령 바이든은 7월 8일에서야 낙태약 접근 보장 등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뒤늦은데다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낙태 금지 주법이 있는 곳에서는 영향력이 없다. 바이든은 ‘하이드 수정안’(낙태 시술 대부분에 연방정부 기금 사용을 금지한 법안) 폐기도 말하지 않았다.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하루 뒤 백악관 앞에서 여성들이 바이든더러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한편, 미국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도 낙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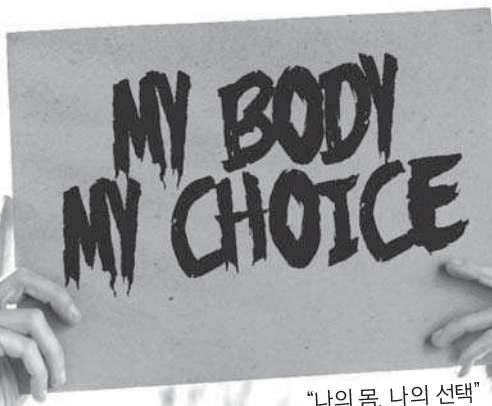
일부 기업은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소속 노동자가 낙태를 위해 주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과 골드만삭스, JP모건, 씨티그룹 등 금융회사, 통신기업 AT&T, 월트 디즈니 등이 낙태를 위한 이동 경비나 그 기간 유급 휴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침묵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낙태 비용 지원 소식을 크게 부각했지만, 한 외신에 따르면 이런 기업은 미국 기업 전체의 5퍼센트에 불과하다.

낙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더 확대돼야 마땅하다. 지난해 미국 성인 18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퍼센트가 직장 건강보험에 낙태가 포함되기를 바랐다. 아마존의 노동자들은 이런 조치가 계약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런 행보가 그들이 진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는 아니다.

개별 사용자의 입장에
서도 낙태 금지로 인해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력에서 이탈하는 상황



손해일 수 있다. 미국에서 여성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핵심적 노동력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놓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은 낙태 권리를 후퇴시켜 온 공화당과 그 인사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 왔다. 미국의 낙태권 활동가들은 기업의 어마어마한 후원이 없었다면 각 주에서 낙태 반대 정치인과 단체가 저토록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을 거라고 꼬집는다.

미국의 독립 감시 언론 <파풀러 인포메이션>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13개 주요 기업은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와 각 주에서 낙태 금지 조치를 이끌어 온 전미공화당상임위원회(NRSC), 공화당 주지사협회(RGA) 등에 1520만 달러를 기부했다.

여기에는 노동자에게 낙태 비

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아마존(97만 4000달러), 시티그룹(68만 5000달러), 구글(52만 5000달러), AT&T(147만 2000달러)가 포함됐다. 이는 낙태 반대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것을 제외한 액수다.

여성 단체인 울트라바이올렛은 2020년부터 미국 기업들이 낙태 금지법을 추진한 의원들에게 1억 954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낙태 지원을 밝힌 AT&T(499만 2000달러), 월트 디즈니(45만 2000달러), 우버(28만 달러)는 여기서도 큰 손이다.

기업이 해당 지역의 유력 우파 정치인에게 돈을 대는 일은 미국에서 흔한 일이다. 그 대가로 기업은 세금을 면하거나 노동정책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는다. 정치인들이 그 돈으로 해당 주에서 여성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릴 낙태 금지를 밀어붙이든 말든 기업에게 그다지 큰 관심사가 아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저항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미국 기업들이 낙태 금지를 최전선에서 추진하는 정치인에게 막대한 돈을 대면서, 자신의 낙태 지원을 홍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성지현

고려대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 본관 농성 부자 학교가 시급 400원 인상 요구를 외면하다

고려대학교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이 7월 6일부터 본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울지부) 고려대분회는 시급 400원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100일이 넘게 투쟁해 왔다.

노동자들은 3월 말부터 평일에 매일 학내에서 집회를 하고 5월 중순부터는 이에 더해 아침 홍보전도 진행했다. 바람이 드세게 불어도, 장맛비가 쏟아져도, 피약벌에도 투쟁을 멈추는 날이 없었다.

그러나 용역업체와 원청인 고려대 당국은 4개월째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협상에 무성의로 일관해 왔다. 노동자들은 “대화라는 게 양쪽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한 쪽이 귀를 막고 있는데 무슨 대화를 합니까?” 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 측이 계속해서 불통 같은 태도를

보이자 노동자들이 투쟁 수위를 높여 본관 농성을 시작했다. 최근 연세대 학생 3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소한 일을 계기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커지는 점이 확인됐는데, 이것도 노동자들의 자신감에 좋은 영향을 준 듯하다.

7월 6일 투쟁이 100일째 되던 날, 각 건물의 노동자 대표들이 학교 총무처에 면담을 요청했다. 원래 4일에 예정됐던 총무부장과 면담이 불발됐고, 학교 측은 언제라도 요청하면 면담에 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총무처는 “건물 밖”에서 얘기하자며 노동자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학교 측은 본관의 문과 창문까지 모두 걸어 잠갔다. 결국 한 본관 직원의 실수로 노동자들이 본관 로비에 들어

갈 수 있었다. 이때부터 본관 복도에서 농성이 시작됐다. 학교 측은 업무 방해와 무단 침입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노동자들은 퇴각하지 않았다.

최근 살인적인 물가로 노동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안 그래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이 절실하다. 게다가 지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인 시급 4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급격한 물가 인상에 견주면 사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자들은 샤워실 설치와 휴게실 개선도 요구한다. 낮 최고기온이 32~33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청소 노동자들은 옷이 땀으로 다 젖어도 마음 편히 씻을 샤워실이 없다. 또, 일을 시작하는 새벽에

는 학교가 에어컨을 틀어 주지 않는다.

주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은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오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곰팡이 문제가 상시적이다. 공간도 워낙 비좁아 불편함이 크다.

고려대는 적립금이 3000억 원이 넘는 부자 학교이다. 그런데도 학교 당국은 매일같이 학교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이런 소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본관에서 집회를 하고 밤에도 조를 짜서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7월 13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집중 집회와 고려대 학생들의 연대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오수진 고려대 학생,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

이유 없이 7개월째 구금돼 있는 리비아 난민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인과 난민 등이 추방되기 전까지 임시로 있는 구금 시설이다. 하지만 출신 국가가 내전과 억압, 정치적·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곳이 돼 버린 이주민의 경우, 보호소는 무작정 구금돼 있어야만 하는 감옥과 다름 없다. 출입국 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가 간 경계에 갇혀 버린 난민들을 방치하고 있다. 여수와국외인보호소에 구금된 한 리비아 난민이 기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려 왔다.



구금 이주민들은 변기와 구분도 되지 않은 비좁은 공간에서 기약도 없이 갇혀 생활한다

본인 소개를 해 주세요.

저는 리비아에서 온 난민입니다. 제 이름은 알라 카이리 빈 자베르입니다. 지금 여수외국인보호소에 7개월째 구금돼 있어요. 얼마 전 이집트로 추방된 난민 S씨는 여기서 제 친구였어요. 그가 가끔씩 공중전화로 <노동자연대>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난민 신청을 하게 됐나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리비아는 정부도 없고 내전과 테러 공격도 점점 더 심해지면서 매우 불안정해요. 살

해 위협도 받고, 심지어 민병대가 제 목숨에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그래서 사막을 건너 옆 나라 튀니지로 도망가 한 달 있다가 2020년 12월에 한국으로 왔어요. 원래 리비아에서 중고차 거래 사업을 했는데, 평소에 한국산 자동차를 다뤄 오기도 해서 한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3개월은 사업 비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리비아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에

요. 그래서 돌아가기가 어렵게 됐는데,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몇 달 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전쟁이 심각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거예요. 직접 살해 위협을 받다 보면 삶이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돼요.

지금 여수보호소에 구금돼 있는데, 외부로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이곳 여수보호소에 아무 이유도 없이 7개월째 갇혀 있어요.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옷이나 음식 같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인간에게나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를 달라는 겁니다. 여기 보호소 이름도 잘못 지었어요. 여긴 외국인을 보호하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히 감옥이나 다름없어요.

리비아로 돌아가면 다시 민병대에게 살해 위협을 받을 거예요. 안전하게 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끝도 없이 구금해 놓고 난민 인정도 해 주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살지 못하게 할 거면 차라리 내보내 달라고도 요구했어요. 여기 감옥에서 천천히 죽느니 차라리 테러 단체의 총에 맞아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보호소 측은 리비아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내보내 줄 수 없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여권을 주면 제가 알아서 출국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이 저를 무기한 구금하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저를 데려왔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마 제 소식이 외부 언론에 나가면 보호소 측에서 휴대 전화 사용도 막을 테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제 목소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박이랑

이집트 난민들, 난민 인정 요구하며 농성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6일부터 이집트 난민 10여 명이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 텐트 등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아이들까지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의 절박함을 말해 주는 듯했다. 필자가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집트 난민들은 농성장에 도착한 필자를 둘러싸고 각자 수년씩 걸리는 한국의 비인도적 난민 인정 절차에 대한 울분을 토로했다. 농성을 주도한 이집트 난민 사이드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농성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부분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째 한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을 이집트에 두고 온 이들은 5~6년째 상봉도 못 하고 너무 힘듭니다.”

다른 이집트 난민 타하위 씨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세계 어디에 난민 심사를 5~6년씩 하며 기다리게 하는 곳이 있나요? 제 동료들은 다른 나라에서 1~2년 안에 모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지 않느냐고요? 차라리 한



“난민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법무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이집트 난민들

국이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무작정 결과를 기다리라 하고 답이 없으니 기다릴 뿐입니다.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리라는 기대도 있고요.”

이들은 난민 인정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들이 차별받아 온 경험을 쏟아 내기도 했다. 두 아이와 함께 농성에 참여한 중인 하산 씨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난민 인정을 못 받다 보니 의료보험 적용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데려갈 수 없어요. 그리고 출입국·외국인

청에 갈 때마다 인종차별을 겪어요. 우크라이나 난민이 와도 똑같이 대할까 싶어요. 한국은 나라에 따라 차별을 하나요?”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해 몇몇 농성자들은 필자를 텐트 안으로 초대했다. 난민들은 각자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지를 꺼내 들며 자신들이 난민 신청을 한 사유를 필자에게 설명했다.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와기흐 씨는 곧 만료되는 여권을 보여 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저는 아내를 못 만난 지 8년이 넘었어요. 얼마 전에는 일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정신적인 압박이 너무 심해요. 지금 김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데 여기 농성에 참여하려고 일도 그만했습니다. 난민 인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멈출 수 있어요.”

한국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냐는 질문에 농성자들은 이렇게 답했다.

“선진국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그에 걸맞은 대우를 난민에게 해 달라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 심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라. 난민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청의 인종차별적 행위 즉각 중단하라. 더는 지연 말고 즉각 난민 지위 인정하라. 저희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위선과 엄격한 국경 통제 속에 난민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들은 이미 수년간의 기다림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 차별 등을 겪어 왔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박이랑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보리스 존슨의 총리직 사임

보리스 존슨의 영국 총리직 사임은 영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보리스 존슨은 2019년 12월 총선에서 보수당에 투표한 “1400만 유권자와의 약속” 운운하며 총리직을 부지하려 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총리는 하원의 과반수 지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지지로 내각이 구성된다. 존슨은 신자유주의 시대 이래 내각의 반란으로 실각한 네 번째 총리가 됐다.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어, 존슨의 전임인 테리사 메이가 그런 사례다. 반면 [같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총선에서 패배해 총리직을 잃은 자는 존 메이저, 고든 브라운, 데이비드 캐머런, 셋뿐이다.

이 시스템 덕에 영국에서 여당은 골칫거리가 된 지도자를 비교적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존슨은 정치적 판세를 거스르려 애썼지만, 판세는 존슨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보리스 존슨은 보수당을 파탄 내고 떠났다. 1990년 대처의 실각은 이후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로까지 이어지는 유럽연합에 대한 끈덕진 집착을 낳았다. 이 집착 때문에 캐머런이 실각했고, 존슨이 기회를 잡았다. 존슨은 테리사 메이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조건을 두고] 유럽연합에 지나치게 타협적으로 구는 것을 이용해 메이를 밀어내고 총리가 됐다. 존슨은 보수당 우파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바라던 하드 브렉시트*를 이루기 위해 보수당 내 친(親)유럽연합파를 숙정했다.

이 때문에 보수당 상층부의 인재층이 얇아졌다. 지금 보수당 대표직에 도전하는 인사가 광대 무리들[뿐]인 이유



사진 출처 Number 10(블러카)

인기 없는 지도자 보리스 존슨을 제거하고 감세, 작은 정부를 더욱 강조하려는 영국 보수당

의 하나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가 감세를 공약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이는 대처주의, 즉 보수당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착각이 지금도 보수당 의원들에게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 지출

그러나 존슨 때문에 보수당은 대처주의에서 상당히 멀어졌다. 부분적으로 이는 존슨이 이른바 “붉은 벽”을 겨냥한 선거 운동을 벌여 2019년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붉은 벽”은 전통적으로 노동당이 강세였던 잉글랜드 북부의 퇴락한 산업 지역을 일컫는 말로, 2016년 국민투표 당시 브렉시트를 지지했다. 이 지역 선거구에서 당선된 보수당 의원들은 예컨대 생계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려고 열성으로 로비해 왔다.

이번 생계비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비상사태에 뒤이어 닥쳤다. 전 재무장관 리시 수낙은 경제 붕괴를 모면하려고 교과서적 대처주의 처방을 유예하고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렸다. 이를 위한 자금은 영국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국채를 사들여 조달했다. 신자유주의 교리에 따르면 대죄를 범한 것이다.

수낙은 가장 최근에 존슨의 압박을 받아 지난 5월에 발표한 정책 패키지에

서 이런 기조를 고수했다. 수낙은 에너지 가격 인상에 고통받는 극빈층 가구 구제에 100억 파운드(약 15조 6020억 원) 가까운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 돈은 석유·가스·전력 기업들에 초과이익세를 부과해 조달했다.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수낙 장관은 엄청난 부를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재분배하고 있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 폴 존슨의 논평이다.

이는 과장이지만, 보수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존슨 정부하에서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올랐다. 2026~2027년 영국의 조세부담률은 1940년대 후반 이래 최고치인 36.3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당 평의원들 대부분은 이를 싫어한다. 존슨은 감세를 약속해 이들의 환심을 사고 총리직을 부지하려 했다. 이것이 수낙의 사임을 촉발한 쟁점인 듯하다. 수낙은 세금 감면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국채로 메우는 것에 반대한다. 보수당 평의원들이 보기에 해법은 공공지출을 줄이고 “작은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감세를 두고 역경매*가 벌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논쟁이 현실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영국과 세계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 팬데믹, 전쟁,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 등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위기와 씨름하고 있다. 다음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위기가 무엇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현 상황에서는 더 크고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 머리가 텅 빈 보수당 평의원들이 바라는 것처럼 더 작고 취약한 국가가 아니라 말이다. 존슨의 뒤죽박죽 기회주의 때문에 영국 국가는 필요했던 방향으로 갔던 것이다.

보수당에게 행운인 것은, 점잖은 정당임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하고 급진성은 아예 씨가 마른 블레어 일파가 지배하는 멍청한 야당 노동당이 보수당의 상대 정당이라는 것이다. 보수당은 존슨을 제거해 유권자들이 노동당에 투표할 가장 강력한 근거를 없애 버렸다. 인기 없는 지도자의 목을 쳐 쇠신을 도모하는 보수당의 전통이 보수당에게 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13호 / 번역 김준호

용어설명

하드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후 유럽단일시장·관세동맹 등에서도 완전히 탈퇴하는 것

조세부담률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역경매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가장 싸게 팔겠다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들이는 경매 방식

텍사스 밀입국 트레일러 질식사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깍기 고문까지 국경 통제의 희생자들

임준형

최근 국제적으로 이주 통제의 야만성을 보여 주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6월 26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외곽에 주차된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에서 5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샌안토니오의 기온은 섭씨 38도가 넘었다고 한다. 고온의 열기에 질식한 것이다.

이들은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이주민들이었다.

바이든을 비롯해 미국 정치인들은 애도를 표했지만, 이런 끔찍한 비극을 낳는 국경 통제 강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예컨대 트럼프가 시행한 공중보건법 42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조항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멕시코와의 국경을 넘는 미등록 이주민에게 난민 신청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이주민들은 더 위험한 경로와 방법으로 국경을 넘게 됐고, 그 결과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6월 24일에는 모로코에서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령 멜리야로 진입하려던



생존자와 사망자 시신이 뒤섞여 모로코에서 스페인 멜리야로 진입하려다 제압당한 이주민들

이주민들을 양국 경찰들이 폭력적으로 저지하면서 이주민 37명이 사망했다. 스페인은 우크라이나 난민 12만 4000명을 받아들였지만, 아프리카인들에게는 국경을 걸어잠그고 있는 것이다.

현재 스페인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PSOE)과 한때 급진적이었던 포데모스가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영국은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을 르완다로 추방하려 한다. 영국은 르완다에 이들을 수용하는 대가로 186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르완다는 2018년에도 식량 배급 제한에 항의하다 피신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12명을 총살하는 등 인권 침해로 악명 높다.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영국 전역에서 열렸고, 6월 14일 첫 추방 대상이 된 37명을 태운 비행기가 유럽인권재판소의 제지로 이륙을 불과 몇 분 앞두고 멈췄다. 추방될 뻔했던 한 이주민은 “사형당하는 것 같았다”며 당시의 공포를 전했다.

난민 입국 막고 이주민 권리 유린하는 한국 정부

국경 통제로 인한 이주민·난민들의 고통은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난민이 공항이나 항만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일단 입국을 막는다. 그리고는 정식 난민 심사 기회를 줄지 말지 사전 심사를 한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항이나 항만에서 난민 신청을 한 1895명 중 46퍼센트만이 이 심사를 통과했다. 나머지는 위험한 본국이나 제3국으로 송환됐을 것이다.

송환되지 않으려고 버티면 공항에 억류되는 신세가 된다. 루렌도 가족이 대표적인 사례고, 2020년에는 한 난민이 인천공항에 무려 423일 동안 억류돼 있었다. 올해 6월에도 미얀마 난민 3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다가 난민 지원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이주 통제는 단지 국경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다. 정부는 입국을 허용한 뒤에도 이주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거

나 박탈한다.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면 체류 자격을 박탈해 한국에서 쫓아낼 수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이다.

또 한국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체류 연장을 매우 어렵게 한다. 예컨대 결혼 이주 여성은 이혼 시 남편의 귀책 입증하지 못하면 체류를 연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남편에 대한 종속이 심해지고, 가정 폭력에 취약해지기도 한다. 다만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 이혼하더라도 체류할 수 있다. 요컨대 결혼 이주 여성이 노동력 재생산과 돌봄이라는 구실에만 충실하게끔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이주 통제를 벗어난 이주민들을 가혹하게 대한다.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들의 공포는 엄청나서, 단속을 피하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외국인보호소는 단속에 붙잡힌 미등록 이주민을 강제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받아야 할 체불임금 등이 있거나, 특히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만약 이곳에서 추방되지 않고 쉽게 석방될 수 있다면 이주 통제에 구멍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장기 구금을 해서라도 견디지 못해 떠나게 만들려 하고, 이에 항의하는 구금자들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다.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모로코 난민에게 ‘새우깍기’ 고문을 한 사건도 이런 맥락 속에서 벌어졌다.

지배자들의 필요에 따라 변하는 국경 통제

국경과 이주 통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발원해 세계 각지로 이주했다. 국경으로 구획된 국민 국가는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것이다.

국민국가가 등장하고서도 19세기까지는 국경이 열려 있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 때문이었다. 노예 무역을 통해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 이주시켰고, 프랑스 출신 방직공들이 영국의 산업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은 이주민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자본 축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져 국경 단속의 열기가 전례 없이 고조되고 나서야 여권과 비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국경 통제는 제2차세계대전 후 장기 호황이 시작되자 다시 완화됐다가 1970~80년대 불황을 겪으며 강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는 난민이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는 석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동에 군사 개입하면서 이슬람 혐오를 부추겼다. 중동에 개입한 결과로 주로 무슬림인 난민이 대량 발생해 유럽으로 향하자 이들에게 국경을 걸어 잠그는 것이 이슬람 혐오의 정치적 표현이 됐다.

이처럼 각국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국경 장벽을 높였다가 낮추기를 반복해 왔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고, 한 나라 안의 노동자들을 출신지에 따라 분열시켜 단결을 가로막으려 한다. 빈곤, 실업, 복지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을 떠넘기는 데에도 이용하곤 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이 논의될 때마다 이주노동자 차등 적용을 주장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날 것이다. 정부는 난민을 ‘경제적 목적의 가짜 난민’이라고 호도하고, 이는 이주민과 난민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편견을 부추긴다.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지배자들이 신성불가침의 주권으로 여기는 국경 통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이주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 통제로 고통을 겪는 이주민들에게 연대해 싸워야 한다.

COP27 이집트 회의 개최 반대 이집트 활동가 호소문

올해 11월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린다. 이에 반대해 6월에 **이집트 활동가들**이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개발도상국이 의장국 지위로 COP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다 보니 국제 기후 운동 진영 일각에서는 이집트가 의장국을 맡는 것이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남반구, 즉 개도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부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이집트 활동가들은 엘시시 군부 정권이 기후 회의를 이용해 이집트의 억압적 현실을 그린 워싱 하려는 시도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 연대)는 이 활동가들의 요청을 받아 호소문을 본지에 싣는다.

올해 11월 COP27 회의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관광 도시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립니다. 각국 정부는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회의에서 한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후 재앙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지만, 정치 지도자와 주요 기업은 지구를 구할 조처는 뒷전에 놓은 채 자원과 시장, 지정학적 지배권을 둘러싼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층 운동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COP27 회의는 드나드는 주요 도로가 하나뿐인, 경비가 삼엄하고 외딴 관광 휴양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려면 비싼 호텔에 숙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층 조직들, 특히나 가난한 나라의 기층 조직들에게 COP 회의는 그림의 떡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집트 정부는 회의 기간에 반대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활동가들에게 진정한 풀뿌리의 시위가 아닌 거짓된 '인공 잔디' 시위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집트의 친정부 NGO들은 회의장 근처에서 '인공 잔디' 시위를 벌이며 마치 이집트에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주려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이집트 반정부 활동가들은 회의 기간에 샤름 엘셰이크 근처에 가는 게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국제적 기층 운동 단체들이 이런 술수에 넘어가 이집트 국가가 꾸미는 사기극에 참여하게 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COP27 개최를 준비하는 동안 인권 운동가, 언론인, 비폭력 시위대, 변호사, 야당 정치인, 활동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권리,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또는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가혹한 이집트 감옥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이자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과 빈국의 일부입니다. 동시에 이집트는 잔인하고 부패한 군사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엘시시 정권은 회의 기간과 회의를 앞두고 몇 개월 동안 글로벌 사우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필요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처럼 행세할 것입니다. 이는 순전한 사기입니다. 이 정권은 2013년부터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를 대변할 뿐입니다.

2013년 7월 엘시시 장군은 무함마드 무르시와 무슬림형제단 정부의 정책 실패, 정치적 마비, 약속 배신이 자아낸 상황을 이용해 무자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권은 공포 정치를 통해 모든 형태의 반대 세력을 분쇄했습니다. 이 정권은 이집트인들을 대표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식으로든 아프리카 대륙이나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엘시시는 정권을 그린 워싱 하고 몇몇 전시용 대체/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부각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엘시시가 이집트인들과 환경 모두를 유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 워싱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유한 선진국에게서 최대한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돈은 대부분 결국 똑같은 산업국에 개설된 엘시시와 그의 장군들의 은행 계좌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둘째, 이집트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이른바 '민주적'이라는 서방 정부의 지도자들은 엘시시의 이런 시도를 눈감아 주려 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가장 큰 대



엘시시 군부 정권이 기후 회의를 이용해 이집트의 억압적 현실을 그린 워싱 하려 한다

가를 치를 사람들은 이집트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빈국의 일반 대중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후 변화와 환경 변화를 늦추거나 역전시킬 변화를 도입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국제적 운동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에게는 결사와 집회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2014년 이후 500개 이상의 이집트 반정부 웹사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혹한 법, 초법적 투옥, 고문, 심지어 살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이집트 활동가들은 괴롭힘·구속·감시를 당하며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석탄 수입에 반대하는 투쟁이든, 주거 지구와 가까운 시멘트 공장과 이로 인한 건강 피해에 항의하는 투쟁이든, 수원을 오염시키는 비료 공장에 항의하는 투쟁이든, 심지어 건설 사업을 위해 도심의 나무와 녹지를 파괴하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이든, 쟁점이 무엇이든 간에 정권의 반응은 항상 똑같습니다. 바로 탄압입니다.

우리는 회의에 참가할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들의 정부들에게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도자들은 11월에 샤름 엘셰이크를 방문해 이집트 정권을 축하하고 엘시시 정부의 그린 워싱을

도울 것입니다. 그들은 사업 거래와 자신들 간 동맹을 강화하러 회의에 참석합니다. 별 볼 일 없고 불충분한 기후 변화 해결 약속도 하겠지만, 그들은 이 조차도 이행할 의도가 없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겔프 절대왕정들과 새로운 석유와 천연가스 거래를 하려고 이들에게 굽실거리는 꼴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맞선 국제적 기층 운동 활동가들과 민주주의, 자유,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 투쟁을 분리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해롭기만 할 것이라는 점이 어느 때보다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11월 회의를 앞둔 기간과 회의 기간에 반대 행동을 조직하는 모든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엘시시가 글로벌 사우스의 대변자를 자처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엘시시가 살인 정권을 그린 워싱 하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가 없는 세계를 위해 빈국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함께 행동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 연대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기후와 민주주의를 위한 이집트 행동
번역 박이랑



알렉스 캘리니코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논쟁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7월 2일 런던대학교에서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개 토론에서 한 발제와 정리 발언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패널로 질베르 이슈카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 서게 돼 정말 기쁘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이한 가상 세계를 통해서 만나 온 여러분을 여기서 직접 보게 되니 정말 반갑다.

그러나 지금은 쾌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포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매일 양측에서 200명이 전사하고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듯이, 침략군인 러시아군의 무차별적 포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우크라이나를 떠나, 단지 서쪽의 유럽연합뿐 아니라 동쪽의 러시아나 옛 소련의 일부였던 나라들로 피난을 가고 있다.

매우 끔찍한 일이다. 당연히 우리는 이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은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해 왔다. 우리는 러시아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철군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참사를 직시하면서 이 상황이 단지 양극화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이 전쟁은 단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충돌이 아니다. 물론 양국의 충돌은 이 한창인 열전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플레이어

이 전쟁의 당사자는 적어도 셋이다. 제3의 당사자는 서방 제국주의다. 서방 제국주의 세력에는 미국과 나토의 미국 동맹국들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어느 정도는 일본 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합심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양국이 충돌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서방 제국주의가 제공하는 군사적 지원의 규모는 엄청나다. 전쟁 초에 약속한 지원 외에도 미국은 4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곡사포, 대전차 미사일, 고속기동포 병로켓시스템(HIMARS) 등 갈수록 정교하고 사정거리가 긴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나토는 지난주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나토의 전투 부대인 신속대응군을 4만 명에서 30만 명 규모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8만 명이었던 동유럽 주둔 미군의 수를 22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영국에는 스텔스 폭격기 대대를 배치할 것이다. 한편, 영국도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 지대에 병력을 증파하고 있다.

이처럼 서방 제국주의 열강은 막대한 군사적 동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나만 하는 말이 아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전략 개념'은 러시아를 서방의 "이익과 가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로 지목한다.(여기서 "이익과 가치"라는 표현을 쓴 것은 흥미롭다. 경제적 측면과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결합돼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쟁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국민방위전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제국주의간 충돌이기도 하다. 여기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를 앞세워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당사자가 적어도 셋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배경(전경(前景)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배경이다)에는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다. 양국의 대규모 갈등이 심종팔구 앞으로의 시기를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갈등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의 성격

그러나 좌파 일각에서는 이 전쟁의 첫 번째 차원, 즉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차원에 초점을 맞춘다. 몇 주 전 세계의 많은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이 그런 사례다. 여기에는 트로츠키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연명했다. 여기 있는 아슈카르나, 미국에서 활동하고 나와도 친분이 있는 로버트 브레너도 여기에 연명했다. 브라질의 주요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도 많은 수가 동참했다.

그 성명서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충돌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베트남 전쟁이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베트남 인민의 투쟁이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렇게 주장한다. “이 전쟁은 제국주의간 전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고, 러시아와 서방 자본의 침투를 당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궤변이다. 이런 설명은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고 벌이는 일들을 전혀 그림에서 도려낸다.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러시아의 식민지(또는 신식민지)”라는 일각의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의 정치 체제가 서방으로 확실하게 기울고 나서 우크라이나와 서방 제국주의의 연계는 갈수록 강화됐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연계가 강화됐다.

나는 한 전직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이 쓴 매우 흥미로운 글을 읽었다. 그 글은 2015년부터 미군 조직들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맹훈련해 온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다. 러시아가 침공하기 한 해 전에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수억 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

앞서 언급한 국제 좌파들의 성명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전쟁을 대리전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을 그저 나토에 놀아나는 존재로 그리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이기까지 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남의 주장을 완전히 곡해하는 것이다. 어떤 전쟁이 대리전이라고 해서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가 자신을 대리인으로 앞세운 국가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인 것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이 참가한 합동군사훈련 '래피드 트라이던트 2014'

아니다.

그보다는 이해관계가 서로 만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50~1953년에 벌어진 한국 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었다. 그 전쟁에서 스탈린은 북한 정권과 김일성, 중국과 마오쩌둥을 모두 소련의 대리인으로 써먹었다.

당시 역사를 보면, 김일성은 남한을 침공하기를 매우 간절하게 원했다. 그는 정말로 일전을 원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신중하게 김일성을 제어했다. 아시아에서 서방 제국주의를 밀어낼 뿐 아니라, 1949년 혁명의 승리로 막 수립된 중국 정부를 소련에 묶어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리전에서 대리인 구실을 하는 국

가들은 저마다 나름의 국가적 자율성과 이해관계가 있다. 다만, 이런 국가들이 훨씬 더 강력한 국가들과 그 국가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미국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에게 물어 보라. “우리의 목표는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솔직한 대답이다. 너무 노골적이니 좀 어조를 누그러뜨리라고 바이든이 불평했을 정도다.

미국은 자신이 “독재적인 열강”과 충돌하고 있다면서 꽤나 자의식적이다. 여기서 “독재적인 열강”은 중국과 러시아를 특별히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전쟁을 꾸며냈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음모론자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을 이용해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중국에 이런 교훈을 주려 한다. ‘너희가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려 한다면 우리는 너희를 저지할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을 베트남 전쟁에 비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베트남 공산당은 민족 해방 투쟁을 이끌며 처음에는 프랑스 제국주의, 그다음에는 미국 제국주의에 45년 동안 맞서 싸웠다. 아슈카르의 동료인 피에르 루세가 이에 관해 훌륭한 책을 쓴 바 있다. 베트남인들은 1950년대 초 프랑스를 패퇴시켰지만, 소련과 중국이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사실상 베트남을 배신해,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의 분단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은 남베트남의 공산당 세력인 베트콩이 봉기를 조직하면서 시작됐다.

북베트남에 근거지를 둔 베트남 공산당이 소련과 중국의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 소



그리스 철도 노동자들의 수송 거부로 우크라이나로 가는 무기를 실은 열차가 멈춰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포격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 도시 미콜라이프

련과 중국 정부는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었다. 베트남 지도부는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설 공세 등 그들이 감행한 공격들은 베트남 지도부가 대체로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는 전혀 처지가 다른 것이다.

앞서 말한 국제 좌파 성명에 연명한 아슈카르나 그 밖에 내가 아는 많은 활동가들의 문제점은 레닌이 제1차세계대전 동안 끈질기게 매달렸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복잡한 현실과 거기에 내재한 모순들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상호연관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전에 아슈카르는 나토와 나토의 동진을 비판한 매우 훌륭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아슈카르는 그 분석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련짓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다. 이처럼 아슈카르와 그 성명의 연명자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펼쳐지는 무시무시한 일과 온갖 참상을, 유럽뿐 아니라 전 지구적 수준에서 심화되고 있는 제국주의간 쟁투라는 맥락 속에 자리매김하는 통합적인 분석을 거부한다.

문제는 잘못된 분석에 기초해 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입장은 좌파가 사태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아슈카르는 전쟁 초에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구분[하며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내 생각에 그런 구분은 가능하지 않다. 그 성명도 이 문제를 파고들지는 않는다.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지하고 러시아의 패퇴를 원하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는 주요 서방 자본주의 나라들의 주류 정치 세력들이 취하는 입장 안에서 놀게 된다. 물론 다들 알다시피 서방 세계 바깥의 지역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개발도상국·빈국으로 갈수록 러시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열광은 빠르게 사그라든다. 그러나 서방에서 나토에 침묵하면 주류 정치와 입장을 같이하게 된다.

독자적 과제

이 대목에서 폴 메이슨의 비극적 사례를 잠깐 언급하겠다. 아슈카르를 그와 엮으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는 메이슨이 [서방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과 활동가들을 학계에서 쫓아내거나 공격하려고 영국 정보기관의] 이러저러한 자들과 손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제기를 차치하더라도(어떤 점에서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메이슨은 영국 정부를 지지하며 갈수록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무기 지원과 군비 증강을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며 주류 정치 세력들보다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심하게도 메이슨은 국방부를 강화하고, 폴라리스 핵잠수함을 늘리고, 핵무기 이외의 온갖 무시무시한 무기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슈카르 등이 연명한 공동 성명은 메이슨과 입장이 같지 않다. 그러나 그 성명에는 정치적 공백이 있다. 그 성명은 이렇게 말한다.

‘정말 끔찍한 전쟁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이게 끝이다. 이 전쟁에 관한 좌파의 독자적 입장이 없는 것이다. 그저 주류 정치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는 제1차세계대전 때 카를 카우츠키가 취한 태도를 연상케 한다.

제1차세계대전 때 주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각자 자국 정부의 전쟁 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카우츠키는 여기에 이렇게 답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제2인터내셔널이 끝장났다고 하지는 마라.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잠시 가동이 중단됐을 뿐이다. 전쟁이 지나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현재 많은 국제 좌파들도 그러고 있다. 이 전쟁에 직면해서 사실상 활동을 멈추고 있다. 확전의 동학이 단지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만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무기가 동원되는 충돌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서방의 안보 싱크탱크에 몸담은 등신들은 러시아를 패배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패배시키자고 부추기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이다. 전술 핵무기 사용을 군사 교리로 정해 놓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패배시켰다는 것이 과연 가당한 얘기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제1차세계대전 때 레닌과 룩셈부르크가 취한 입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들은 제2인터내셔널이 실제로 죽었다고 선언하고 제국주의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전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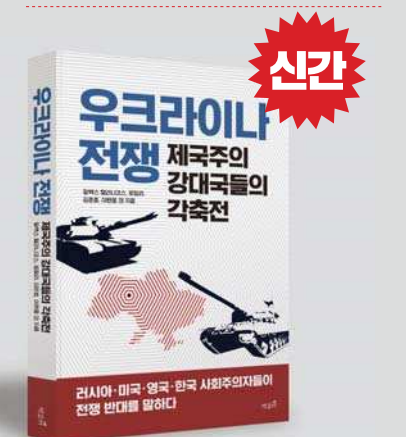
낯는 체제에 맞서려 했으며, 특히 자국의 지배계급에 초점을 맞췄다. 카를 리프크네히트의 구호처럼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것이었다.

아슈카르 등의 동지들이 취한 입장에 따르면 주적은 국내에 있지 않다. 주적은 크렘린군에 있는 푸틴이 된다.

푸틴이 정말 만악의 근원인가? 전쟁은 오직 푸틴 때문에 벌어졌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정치적 입장은 피상적인 것이다.

아슈카르나 그의 동지들이 러시아 제국주의를 혐오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나는 그 동지들이 아마도 그런 혐오에서 비롯한 그 입장을 재고하고 진정한 반제국주의 진영에 합류하기를 바란다.

추천 책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알렉스 캘리니코스, 로잘리, 김준호, 이원웅 외 지음, 책갈피, 352쪽, 17,000원



정리 발언

아슈카르는 곡해에 관해 불평한다. 그러나 나도 '진영론' 딱지를 붙이는 곡해를 멈추라고 아슈카르에게 촉구하고 싶다.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가 서방 제국주의에 비해 차악이라고 보지 않는다.

비록 논쟁을 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지만 아슈카르는 '신진영론'에 관한 꽤 추상적인 논지를 펴면서 전쟁 지지연합이 진영론에 빠졌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진영론자들은 전쟁지지연합에서 완전히 주변화됐다.

그러니 양측 모두 곡해는 피하자.

둘째, 아슈카르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동의한다. 그러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모든 제국주의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우리 지배자들의 제국주의에 관해 특별한 접근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제국주의의 패배를 주장하는 것은 옳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질베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제국주의의 패배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안제이 제브로프스키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이 물음이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패배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패배는 핵심적으로 대중 투쟁, 특히 노동계급 투쟁의 발전에 크게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 서방의 제국주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러시아에 있지 않다. 우리는 영국에 있다. 우리는 나토 같은 미국의 동맹을 지명하는 데에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오래된 제국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아슈카르에 따르면 우리는 전쟁 당사자가 아니다. 그저 구경꾼일 뿐이다. 전쟁은 오로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일이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슈카르의 어떤 주장, 곧 진정한 위협은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이 아니라 서방과 중국의 대결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그의 논지를 약화시킨다. 서방 제국주의는 방향을 미세 조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6월 말 나토 정상회의는 이른바 '권위주의'에 맞서자며 그런 방향 조정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물론 서방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은 중국이



러시아 제국주의를 규탄할 뿐 아니라 서방의 제국주의나 그에 대한 협력에 반대하는 것이 좌파가 낼 수 있는 독자적 목소리다. 5월 21일 서울 반전 집회

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러시아를 먼저 상대하려 한다. 그들에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서방 지배자들의 대중국 공세 강화를 푸틴 탓으로 돌리는 것은 터무니없다. 제국주의자들은 모두 서로 경쟁하고 서로에게 책략을 편다. 당연히 상대방이 벌인 일을 이용해 먹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푸틴이 지금 상황에서 최고 악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사태를 바라보면 특히 더 그렇다.

물론 서방은 전쟁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있다. 그랬다가는 제3차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들은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퍼 주고 있다.

역사적 유비

아슈카르는 베트남전 당시 소련이 북베트남에 지원한 전투기 대수와 무기의 양을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지만 역사적 유비는 단순히 전투기 대수를 세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반적인 정치적 맥락을 봐야 한다.

젤렌스키와 그의 정부는 동유럽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침범 내지 무장한 경비견 구실을 자처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과 같은 곳이 될 것이라 했다.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하는 구실이 무엇인가? 서방 제국주의의 경비견이다.

아슈카르는 1935년 에티오피아 전쟁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 에티오피아가 노예제 사회였음에도 트로츠키가 이탈리아 제국주의에 맞서 에티오피아의 승리를 지지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알토당토않은 얘기다. 당시 무솔리니는 에티오피아를 정복해 19세기 말에 이루지 못했던 이탈리아 제국주의의 숙원을 이루려 했다.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

물론 푸틴은 온갖 국수주의적 망상에 취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크라이나 상황은] 마치 에티오피아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였던 하일레 셀라시가 영국과 프랑스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다. '나에게 무기를 잔뜩 보내 달라. 그러면 이탈리아를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그 일대에서 당신들의 경비견이 돼 주겠다.' 그런 맥락에서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무솔리니의 침공이 정당한 것은 아닐 테다. 그러나 그런 맥락이라면 트로츠키가 어떤 입장을 취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에티오피아 전쟁을 사례로 드는 것은 잘못된 유추의 오류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트로츠키가 취한 입장을 경전처럼 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마구 퍼 주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자거나, 정전 협정을 맺을지의 여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더해져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러시아는 그들이 너무 많이 후퇴했다고 판단하고 반격을 꾀할 것이다. 그러면 핵무기가 동원될 수도 있는 확전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우리는 감히 추측하기도 싫은 무시무시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슈카르가 취한 입장의 비극적인 점은 좌파에게 아무런 독자적 과제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저 보수 일간지들과 보리스 존슨과 함께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러시아가 패배하는 꼴을 보자'고 하는 것이다. 좌파가 고유한 입장 없이 무위도식하고 주류가 취하는 입장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 그렇다. 우리는 제국주의 기구의 기능에 차질을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보내는 데 차질을 준 그리스 철도 노동자들을 지지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포식자들 사이의 쟁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저지해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앞서 했던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는 룩셈부르크와 레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들의 입장은 분명했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라는 괴물을 낳았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번역 이원웅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이정구 중국경제 연구자

이 글은 7월 7일 노동자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토론회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의 발표문이다.

미중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다가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이는 날이 오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 일부는 미국에 반대해 중국을 지지하는 것이 비극을 막거나, 아니면 비극이 일어나도 그 참상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하고 희망을 걸어 보는 듯합니다.

이런 한 가닥 기대를 걸어 보는 사람들의 일부는 좌파로, 그들도 중국이 사회주의 사회라는 통념, 상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중 무역전쟁이나 홍콩 민주화 시위 또는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의 독립 운동 등의 쟁점이 불거졌을 때, 중국을 변호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중국이 여전히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거나, 또는 중국 사회가 미국 등의 서구 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진보적인 사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민공사의 해체나 시장 개방 같은 변화들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민공사를 설립하고 시장을 거의 폐지했던 1949년의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을까요? 중국 헌법의 서문은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실현”됐고, “착취가 소멸”했고, “무산계급 독재가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중국을 무산계급이 지배하고 있고 중국에 착취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상하이



국민당이 통치한 상하이에서 아이를 안고 구걸하는 여인

나 베이징 등 대도시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무산계급 사람들이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착취가 없다면 해마다 활발히 일어나는 중국의 노동쟁의는 뭐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사회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국유 경제를 사회주의라고 학교에서 배웠고, 매스 미디어도 이를 상식으로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의 공리처럼 증명이 불필요한 자명한 진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1백 년도 더

전에 카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는 노동계급 자신의 행위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학교와 언론, 정치인들이 무엇을 사회주의라고 부르든 간에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또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국유화가 시행된 적도 없는 파리 코뮌을 노동자 국가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규정했습니다.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으로 수립된 소비에트 국가도 내전이 격화되기 시작한 이듬해 7월까지의 국유화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혁명 정부는 생산의 노동자 통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917년 10월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다는 뜻입니까?

국유화 여부가 곧 사회주의의 잣대가 아닙니다. 국가가 누구의 것이냐, 곧 국가를 어느 계급이 통제하느냐가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혁명은 누구의, 어느 계급의 혁명이었나요? 그 혁명으로 탄생한 신생 국가를 누가, 곧 어느 계급이 통제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949년 중국 혁명은 일본과 서양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독자적 국민 국가를 세우기를 원한 좌파적 지식인들이 지주 제도 폐지를 원한 농민을 지도해서 일으킨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중간계급의 민족 해방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에서 중국 노동계급은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 응원자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부터 이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혁명의 성과

1940년대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두 세력이 중국의 패권을 두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고위 관료, 군장성, 지주, 대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노골적인 자본주의 정당이었습니다.

반면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서쪽 지방의 연안을 중심으로 그 지역 농민에

사회적 기반을 둔 좌파적 민족주의 정당이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본질적으로 고위 관료와 4대 부자가문(쿵 씨, 쑹 씨, 장 씨, 천 씨)을 위한 정부였습니다. 국민당 통치 지역에서는 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대량 실업 그리고 빈곤이 나타났습니다.

국민당 장교들의 부패는 인민해방군

의 헌신적 활동과 뚜렷하게 대비됐습니다. 국민당 장교들은 부대원들의 급료와 보급품을 착복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1949년 혁명 과정은 본질적으로 국민당 군대와 인민해방군이라는 두 정규군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도시 노동계급과 대다수 농민은 방관자에 불과했습니다. 공산당은 도시 가까이 진

격하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종업원들은 일을 계속하고 영업은 평상시처럼 돌아가게 하라. ... 국민당 관리들과 경찰관들은 자기 직무에 그대로 남아, 인민해방군과 인민 정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물론 국가 경제의 파탄과 빈부격차의 확대, 국민당의 무능으로 인해 대다

수 중국인들은 끔찍한 고생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산당이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49년 혁명은, 물론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도시 지식인들이 지휘한 농민 군대가 옛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일본과 서방 제국주의 권력을 중국 대륙에서 내쫓고, 새로운 사회 질서의 토대를 놓은 근본적 사회 변혁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새 정부는 토지개혁을 단행해 지주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이제 지주는 더는 지배 계급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새 정부는 지주들에게서 토지와 가축, 농기구 등을 몰수해, 중국 인구의 압도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에게 동등하게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덕분에 농민들은 분배 받은 토지를 개인 소유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1952년 말에 이르면 전국 농민의 90퍼센트 이상이 토지를 분배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민들이 서로 만나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인사, “밥 먹었어?” 대신에 “동지, 해방됐어?”라고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또한 1949년 혁명의 성과로 혼인법이 공포됐습니다. 혼인법은 유교적 가족 제도에 억눌려 있던 수천만 여성의 해방을 목표로 한 것이었는데, 수세기 동안 자행돼 온 아동 혼인을 금지하고, 최소 결혼 연령을 남자 20세, 여자 18세로 정했으며, 전족(纏足)이나 축첩(蓄妾) 그리고 유아 살해도 금지했습니다.

이혼은 간단한 쌍방간 동의로 가능했고, 이혼에서 여성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았습니다. 또한 여성은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돼 분배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개혁과 민주주의적 개혁만으로는 1949년의 변화를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49년 혁명의 성격을 더 정확히 보려면 새 정부와 노동계급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새 정부의 소수 민족 정책 문제는 시간 제약으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난징으로 들어오는 인민해방군 공산당은 투쟁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명령했다

도시의 점수와 관리

인민해방군이 도시로 입성했을 때 도시 주민들(다수가 노동자)은 인민해방군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혁명의 능동적 행위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완전히 무력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1949년 혁명 전에도 도시 노동자들은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수준 하락과 물자 부족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와 국민당 통치에 맞서 종종 저항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이 투쟁을 지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투쟁으로 공산당 지지가 증대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혁명 후 공산당에게는 “도시 점관(接管)”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점관”은 점수하여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도시 노동자들은 공산당이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을 보고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 같은 개혁도 하리라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시행한 “점관” 정책은 본질적으로 국가 경제와 민생에 유익한 사기업과 민족 부르주아들을 보호하고, 생산의 회복과 발전을 최고 목표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기자는 이런 조치들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도시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여 환심을 사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유 공장에서 생산에 대한 최고 권위를 경영자에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1949년 혁명 후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생산을 장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노동조합이 경영자와 한편이 돼 행동하는 경향이 비밀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산업 생산이 확대되자 공산당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영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노동조합은 경영자 양성 훈련장이 됐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공식 노동조합인 중화전국총공회는 사용자 단체라고 비난받고 있는데, 이런 비난을 받은 것은 이미 이때부터였습니다.

공산당이 일터에서의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며 추진한 공장관리위원회와 직공대표대회(職工代表大會)도 유명무실하거나 거수기 구실을 하는 기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껍데기 같은 조직을 두고 오늘날 일부 좌파는 노동자가 생산을 통제하는 “민주관리”라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막상 중국 노동자들은 당시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공산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民)에 대한 주인(主人)’을 의미할 뿐이다.”

중국혁명 직후에 중국의 산업은 여전히 사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기업주들에게 재산권, 경영권, 해고권 등을 허용하는 일정

한 타협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한편, 공산당은 국유기업 경영 관료의 부패와 비효율을 막기 위해 “3반(부패 반대, 낭비 반대, 관료주의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공산당이 도시를 점수하면서 취한 일련의 정책들은 강력한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생산을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국민국가가 있어야 자본 축적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은 이 목적을 위해 사기업주와 제휴했고, 개혁에 대한 기대를 품은 노동자들은 억압했습니다.(이 시기 공산당과 노동자들의 관계에 관해서는 필자의 논문 ‘신중국 초기 국가와 노동계급의 관계에 관한 한 연구’를 참고하십시오, <https://bit.ly/3nU9I8x>)

이 과정에서 공산당은 이데올로기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공산당은 1951년 말부터 노동자 통제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지식인들에 대한 “사상개조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이런 공산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을 탄압했고 그들의 단체를 불법화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홍콩으로 건너가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리 유학 시절부터 덩샤오핑과 함께 활동했던 트로츠키주의자 정차오린(鄭超麟)은 대륙에 남기로 했다가 노동개조소에 감금돼 27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보기

마오 체제의 확립

마오쩌둥은 국유기업과 사기업이 공존하는 경제 체제를 수십년 동안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려 했지만 국내외 상황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1953년 스탈린이 죽고 흐루쇼프가 권력을 장악하자 그동안 잠재했던 소련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졌습니다.

대만으로 도망갔던 장제스는 미국과 힘을 합쳐 동남부 연안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져서 공사합영(公私合營) 기업들에서 파업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공사합영 기업이란 국유기업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사기업을 말합니다.

국내외의 압력에 직면한 마오쩌둥은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고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본 축적에 성공해야 했습니다.

공산당은 이 과정을 “신민주주의를 거쳐 사회주의 과도기를 실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과정은 신중국을 건설한 공산당이 노동계급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벌인 첨예한 계급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1956~1957년에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1956년은 헝가리에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 소련 군대에 맞서 저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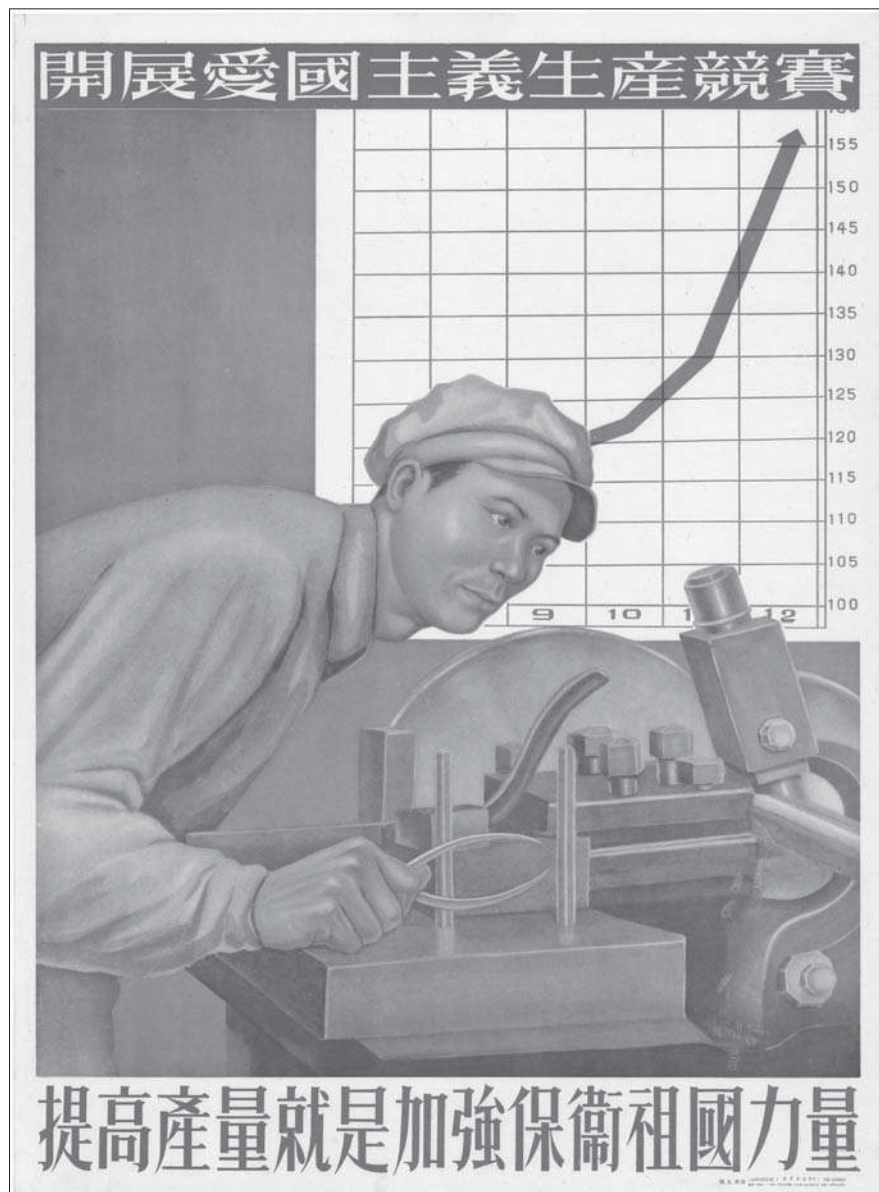
가 패배한 사건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당시 상하이의 한 파업 노동자는 “우리가 헝가리[1956년 헝가리 혁명]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중국에서 또 다른 헝가리 사태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1957년 2월 마오쩌둥은 ‘인민 내부의 모순에 대한 올바른 처리에 관하여’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그는 학생들의 동맹휴업이나 노동자 파업, 거리 시위 등이 첨예한 계급 투쟁으로 번지고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일어난 사태가 이런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1955년부터 급속한 국유화를 추진했었는데, 그 바람에 노동자들은 정치적·시민적 권리가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이런 불만을 제기할 지식인들은 “백화제방 백가쟁명” 운동으로 거세됐습니다. 백화제방 백가쟁명 운동이란 1956~1957년 마오쩌둥이 비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유인책으로 좌우파 지식인들을 단속했던 운동이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인민공사 체제가 확립되면서 국가가 농촌의 잉여 농산물들을 수탈해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 노동자들에게 공급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잉여 농산물을 이전한 데서 이득을 본 쪽은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 관료였습니다.



(위) “생산 경쟁”을 돌격하는 포스터 (아래)허난성에서 토지 개혁을 설명하는 공산당 간부

맺으며

마오쩌둥이 확립한 이런 체제를 흔히들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앞서도 제가 강조했듯이,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성취하는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신중국 등장 이후 노동자들은 파업 권도 없이 노동조합의 감시와 통제 하에서 노동하며 저임금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해방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면서 노동자와 농민들을 착취하고 그 잉여가치로 더욱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체제가 바로 1949년 이후의 중국입니다.

이때 국가 관료는 국가라는 엥겔스가 말한 “집합적 자본”의 인격체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변형인 국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1978년 이후 꾸준히 시장 개방이 이뤄졌지만, 자본주의라는 사회의 기본 성

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국가 자본주의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소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실질적 노동계급 독재’가 이뤄졌다는 중국 사회에서 그 주인이어야 할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주기적으로 투쟁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이를 강경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를 모종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로 파악할 때만 이런 모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의 개혁은 공산당 개혁파의 개혁 조치들이 아니라 텐안먼 항쟁과 같은 노동자와 학생들의 투쟁에 의한 것이었음을 중국 현대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노동자와 학생들이 개혁을 쟁취하는 투쟁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진정한 사회주의, 즉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을 위한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기를 바라고 또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연대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workerssolidarity.org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발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일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맑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새 코너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64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 9

제국주의는 이제 옛일인가?

결말이 어찌될지 지금으로선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거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제국주의 세력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노골적으로 힘을 겨루고 있으니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들이 벌이는 세계적 경쟁의 일부이고, 그 경쟁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돼 버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적 경쟁의 일환으로 보지 않는 좌파들이 있다. 그들은 러시아의 침략과 우크라이나의 방어전을 이 전쟁의 실체로 여긴다.

이는 적잖은 좌파가 제국주의는 과거지사라는 생각을 받아들여 온 것의 반영일 수 있다. 가령 사회진보연대는 제국주의론이 “레닌이 19세기 자본주의의 특성을 개념화해 설명한 틀”에 불과하고,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레닌 등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살던 100년 전과는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제국주의는 19세기와 20세기 초 세계만의 특징일까?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은 더는 쓸모가 없을까?

레닌

1916년 레닌은 《제국주의론》을 쓰면서,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정상 상태를 벗어난 일탈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내재적 동학에서 비롯했음을 보여 주려 했다.

레닌은 마르크스가 살던 때와 달리 이제 기업들이 시장 경쟁 방식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기업들이 경쟁을 거듭하면서 더 강하고 효율적인 기업이 더 약한 기업을 누르고 살아남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며 독점 기업들이 등장해 경

쟁을 쥐락펴락하게 됐다. 이런 독점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세계시장을 놓고 서로 필사적으로 경쟁했다.

그러자 자본주의의 경쟁은 단지 경제적 형태뿐 아니라 국가들 간 군사적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독점 기업들과 연계를 맺은 국가들이 ‘국익’을 위해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독점 기업들 간의 경쟁이 세계 여러 지역을 차지하려는 국가들 간의 투쟁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그 결과,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분할하게 됐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역동성 때문에 강대국들 간의 힘의 차이에 따른 기존의 분할이 세력균형 변동과 금세 맞지 않게 돼, 얼마 안 가 강대국들이 세계 재분할을 둘러싼 투쟁을 다시 벌인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평화는 결코 항구적일 수 없고, 전쟁과 전쟁 사이의 휴전 또는 정전(무장한 평화)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레닌의 이론은 금융 자본을 수출하는 은행의 핵심적 구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레닌의 당대에도 맞지 않는 면이 있었다. (한편, 레닌의 동료인 부하린은 《세계경제와 제국주의》에서 이런 결함을 피했다.)

몇몇 결함이 있었음에도 레닌(과 부하린)의 제국주의론은 양차 세계대전의 세계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돼 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는 양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시대와는 다른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가 100년 전과 다르게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일부 좌파에



중국·러시아에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 나토 정상회의



100년이 지났지만,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여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게 이런 주장은 과거 경제 형태와 조응되는 제국주의도 이제 옛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 구조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 일례로, 오늘날 세계경제는 강대국의 본국과 식민지·반식민지로 구성된 배타적인 세력권들로 나뉘어 있지 않고, 세계경제는 무역과 투자 등에서 상당히 통합돼 왔다.

그러나 몇몇 형태 변화가 있었지만 자본주의의 근본적 특징은 변함없다. 즉, 예나 지금이나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노동 착취에 의존하는, 미친 듯한 자본 간 축적 경쟁의 체제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자본주의는 모순돼 있고 거둬 위기를 초래하는 시스템이다.

국가들 간의 국제 관계는 자본들의 이런 경쟁과 연동돼 있다. 세계화로 국민국가와 자본들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는 주장이 한때 유행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사뭇 달랐다(다르다). 주요 다국적기업들의 경영진은 대부분 특정 선진국 출신들이고, 그 기업들도 선진국들에 본사가 있다. 그리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 나라의 자본가 계급을 대변해 경쟁한다.

이 점은 오늘날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 국가가 강화된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지정학적 위상을 강화하려 하는 반면, 미국 국가는 그런 도전에 대응하면서 미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는 레닌의 핵심 주장도 여전히

히 유효하다. 우리는 지금 다국적기업들과 그들과 연계 맺은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경쟁하고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이 자아낸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좌파들의 일부는 카를 카우츠키의 것과 매우 흡사한 초제국주의론을 조용히 받아들인다. 가령 사회진보연대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형성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더는 제국주의로 이해하지 않는다. (미국 주도의) 거대한 국제 협력 체제 안에서 주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통합돼 있다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심지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는 서방과 동구권을 아우르는 질서였고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 모두 이 질서를 “설계하고 유지”하려 했다고까지 주장한다.

또한 박홍서 교수와 하남석 교수는 오늘날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모두 지금의 자본주의 국제 질서에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두 강대국은 갈등만을 지속하지 않고 타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들은 자본주의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흔히 이어진다.

물론 1945년 이후로 열강 사이의 전쟁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듯했고, 냉전 종식 이후에는 한동안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듯했다. 대다수 좌파에게 이런 상황은 강대국들이 서로

세계를 분할하고 재분할하는 투쟁을 하다가 전쟁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레닌의 주장과 어긋나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냉전 속에서 서방 세계에 형성된 국가 간 시스템이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자국 자본들이 활개칠 수 있는 국제 질서를 바랐다. 이를 위해 여러 국제 기구를 통해 주요 국가들을 자국 주도하에 규합하는 질서를 세우려 노력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는 결코 평화롭거나 안정적인 질서가 아니었다. 물론 미국과 소련 간에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는 않았다. 하지만 핵전쟁 위기가 두 차례나 있었다. 미국은 서구 열강과 일본을 자국 패권 아래에 묶어 두기 위해 자신의 힘을 계속 입증해야 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거나 대리전을 지원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것 같은 시절은 그러나 일시적이었다. 여전히 미국이 다른 경쟁 강대국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한때 압도적이던 미국 경제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돼 왔다. 이와 맞물려 자본주의적 국제 질서에도 균열이 커졌다. 경제력의 지리적 분포가 변하면서 미국의 힘은 점점 제약 받은 반면, 다른 강대국들은 운신의 폭이 조금씩 커져온 것이다. 러시아의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이 바로 그런 사례다.

미국은 자국의 지배력을 지키고 특히 중국 같은 경쟁자들을 견제하고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다.

레닌은 세계경제의 불균등 발전과 모순을 지적하면서, 국가 간 경제력 비중의 중대한 변화가 국제 질서를 불안정에 빠뜨린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미·중 갈등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 체계 바깥에서 성장한 국가이고, 미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그 나름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이런 중국을 미국의 패권을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존재로 여긴다.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밀어내려 하고 미국이 군사력 배치와 동맹 강화로 이를 억누르고자 하는 양상은 본질적으로 레닌이 말한 세계 재분할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경쟁과 관계있다. 미국은 그간의 실패와 패배를 우크라이나에서 만회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그 기세를 더 중요한 전선인 중국과의 경쟁으로 이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이 때문에 전쟁의 양상도 점점 격해지고 확전 위험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인 나토는 최근 정상회의에서 “[강대국들 간의] 더 경쟁적인 세계”에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제국주의는 과거지사가 아니며, 강대국 간의 전쟁 가능성도 엄연히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다.

레닌(과 부하린)의 제국주의론이 주는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는 군사충돌과 전쟁을 끝내려면 제국주의 지배자들 모두에 반대하고, 자본주의 자체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금도 중요하며, 우리가 계속 곱씹어 봐야 할 바다.

김영익



법무부,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 도입하려다 철회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던 시도를 철회했다. 이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침해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폭로한 성과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승, 머리보호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5월 25일 법무부는 여기에 전신 결박용 의자, 족쇄, 보호대 등 5종을 추가하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각한 기본권 제약 사안을 국회 논의조차 없이 규칙 개정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개악안은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언제든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7월 8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개정안에 대해 전신 결박용 의자와 족쇄를 제외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다.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난민에게 '새우껍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되자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약속을 뒤집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철회 요구와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규



김민호 기자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결박 장비 확대하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규탄하고 있다

탄이 잇따랐다.

지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공동대책위'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 새우껍기 고문 피해 난민도 직접 참가해 항의했다.

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 6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에 돌입하자, 6월 22일 수원이주민센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등이 화성보호소 앞에서 이에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한동훈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현재 90일인 보호소 내 CCTV 영상 보관 기간을 30일로 축소하는 등 개정안의 다

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통제 강화 시도는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런 통제 강화 시도에 반대하고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임준형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악플방지법, 온라인폭력방지법 ...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7월 21일(목) 오후 8시 **발제 양효영** <노동자연대> 기자,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공저자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집단에게 모욕감을 주고 편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플방지법이나 온라인폭력방지법, 차별금지법 등이 관심을 받는 이유이죠.

국가와 온라인 사업자들의 규제로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혐오표현 규제가 악용될 위험은 없을까요? 최근 민주당이 혐오표현을 이유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혐오표현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해보려 합니다.



참가신청 bit.ly/0721-meeting

▶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